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인구가족과	담당자	• 인구정책팀장 • 담당자	한선희 ☎ 440-4931 김정진 ☎ 440-493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지역특성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 나서

-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방향성 설정 -
- 처음 시행되는 인천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인천시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으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인천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과업 수행계획을 듣고 전문가 의견 공유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특색있는 정책 발굴 등 인구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진단·분석 ▲인구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 ▲추진체계 정립 및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며, 인구 현황 진단·분석에서부터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까지 단계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시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체감형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여성가족국 내에 인구가족과를 신설하면서 인구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인구정책 분야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인구정책 발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